

이달의 초점

## 사회복지지출의 현황과 과제

OECD SOCX 2025를 통해 본 사회복지지출 현황과 정책 과제

**|신정우|**

사회복지지출과 재정 부담 지표: 인구 고령화 관점에서 본 국제 비교와 시사점

**|이영숙|**

보건 분야 사회복지지출(SOCX)의 규모 및 구성: 의료보장제도와의 관계

**|김희년·정형선|**

OECD 사회복지지출 중 가족 영역 분석 및 재정추계

**|나원희|**

OECD 주요국의 공·사 연금 구조 변화

– OECD 사회복지지출(SOCX)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비교와 진단 –

**|이다미|**

순사회복지지출과 순조세효과로 본 복지국가의 실질 규모와 재분배:

OECD 사회복지지출(SOCX)을 중심으로

**|최혜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순사회복지지출과 순조세효과로 본 복지국가의 실질 규모와 재분배: OECD 사회복지지출(SOCX)을 중심으로

Assessing the Size and Redistributive Effects of Welfare States:  
Evidence from Net Social Expenditure and Net Tax Effect in OECD  
Social Spending

최혜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정통계연구실 연구위원

이 글에서는 공공사회복지지출이나 총사회복지지출 지표와 같은 명목지표만으로는 복지국가의 실질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SOCX 2001~2021년 자료를 활용하여 순사회복지지출, 순조세효과, 민간사회복지지출을 분석하였다. 순조세효과는 복지급여 과세를 통한 환수분(clawback)과 현금유사 세제지원(TBSPs)으로 구성된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은 명목복지지출규모가 클 뿐 아니라 복지급여에 대한 조세가 보편적으로 부과되어 순조세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반면 호주와 미국은 광범위한 세제지원 및 낮은 환수효과로 순조세효과가 작게 나타났다. 한국은 2021년 기준 총지출 18.8%, 순지출 18.7%로 총지출과 순지출이 거의 동일하며, 때로는 음수를 보여 순지출이 총지출을 초과한 시기도 있었다. 둘째, 2010년대 이후 다수 국가에서 순조세효과 격차의 변동을 환수 요인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수렴했다. 독일과 프랑스는 환수 강화, 현금유사-TBSPs 축소로 순조세효과가 점증하였고, 한국은 TBSPs와 환수가 혼재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셋째, 순조세효과가 클수록 가처분 지니계수가 유의하게 하락하는 관계를 보였는데 순조세효과 구성 요소 중 환수분(claw-back)이 분배 개선에 기여하는 바는 컸지만, 현금유사-TBSPs의 평균적 효과는 미미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최근 보편적 현금 급여 및 서비스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복지급여에 대한 과세제도 정비와 현금유사 TBSPs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시사한다.

### 1 들어가며

복지지출을 둘러싼 논의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지표는 공공사회복지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

이하 공공지출)과 총사회복지지출(gross social expenditure, 이하 총지출)이다. 공공지출은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가 사회적 목적을 위해 예산에서 직접 집행한 현금·현물 급여와 사회서비스 관련 지

출로 정부의 재정적 노력의 크기를 가능하는 데 유용하다. 총지출은 공공 및 민간 부문이 제공하는 모든 급여를 합산한 복지지출의 총량을 뜻한다. 이러한 지출 지표들은 복지국가가 얼마나 지출하는지를 보여 주지만, 명목상 지출 규모가 실제 국민에게 도달하는 지출 규모와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 순사회복지지출(net social expenditure, 이하 순지출)이다. 순지출은 총지출이나 공공지출 지표가 포착하지 못하는 재분배의 경로와 강도를 수치화함으로써 명목상 지출이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도달하는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로 논의되어 왔다.

Fishback(2010)은 ‘미국의 복지지출은 북유럽보다 작다’는 통념을 순지출로 재검증한 결과 조세 조정 후 격차가 대부분 사라진다고 지적하였다. Antonelli & De Bonis(2017)는 8개 부문(가족, 보건, 노동시장, 노령, 장애, 실업, 불평등, 빈곤) 지표를 정규화하고 합산해 사회보호성과지수를 만들고, 순지출을 투입값으로 하여 효율성 지수를 산출했다. 그 결과 총지출 기준과 달리 순지출 기준 분석에서는 영국, 아일랜드가 남유럽 국가와 유사한 비효율적 복지국가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이 제기한 문제의식은 공공지출 총량이 아니라 조세·사회보험료·현금·현물 이전의 순효과를 반영한 ‘순지출’ 관점에서 복지국가의 규모와 성과를 평가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한국은 공적연금 체계가 아직 성숙 단계에 이르지 않아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지출이 OECD

평균보다 낮다. 그러나 기초연금,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보편적 복지제도의 도입으로 복지지출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동시에 지출 확대에 따른 재정적 부담의 균형이 새로운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공공사회복지지출뿐 아니라 순사회복지지출, 순조세효과, 환수분(claw-back), 사회적 목적의 세제지원(TBSPs: Tax Breaks for Social Purposes)을 주요 OECD 국가와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위치를 진단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연구 질문을 제기한다. 첫째, 순조세효과와 국가·시기별 변화 양상은 무엇인가? 둘째, 이러한 변화는 환수세액과 TBSPs 중 어느 요인에 의해 주도되는가? 셋째, 순조세효과는 불평등(지니계수)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는가? 즉 조세체계를 경유한 실질 복지의 크기와 분배적 함의를 순조세효과라는 간극을 통해 포착하고, 이를 매개로 복지국가 재정구조와 불평등 간의 연결고리를 탐색한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총지출, 순지출, 민간지출, TBSPs의 국가별 현황을 점검한다. 이어 이들 지표의 2001~2021년 시계열 궤적을 추적하고, 변화분을 환수세액과 TBSPs로 분해하여 주요 기여요인을 규명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사회지출 구조를 진단하고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결론에서는 한국의 ‘총-순 역전’ 현상과 불평등(지니계수)의 관계가 정책 설계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 2 OECD 사회복지지출 지표의 현황

먼저 사회복지지출 관련 지표의 개념과 산출식을 살펴본다. 총지출은 공공지출에 민간지출(의무, 임의)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의무사회복지지출(mandatory social expenditure, 이하 의무지출)은 법률로 가입이 강제된 복지지출인데, 공공사회지출에 의무민간사회복지지출(mandatory andatory private social expenditure, 이하 의무민간지출)을 더해 계산한다. 예컨대 네덜란드와 스위스처럼 민간 보험사가 제도를 운영하더라도 국가가 법적으로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료율·급여 수준 등을 강하게 규제하는 경우 사실상 공적 제도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OECD 통계에서는 의무지출에 포함된다(OECD, 2019).

그러나 이러한 명목지출 지표에는 급여에 부과된 소득세·사회보험료와 세제 혜택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실제 재정 부담이나 가계가 확보

하는 실질 급여 총액을 온전히 보여 주지 못한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OECD는 격년 주기로 순지출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순지출 개념은 1990~1994년 덴마크·스웨덴 재무부와 네덜란드 CPB가 현금급여에 부과된 소득세, 사회보험료, 부가가치세(VAT)를 역추적해 내부 통계로 산출한 데서 출발했으며(Adema, 1999; 2001), 이후 OECD가 이를 공식화하여 SOCX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의 순재정 부담과 가계의 실질 소득보장 수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순지출은 총지출에서 급여 지급 단계에서 회수되는 직간접세와 사회보험료(claw-back)를 차감하고, 현금급여를 대체하는 현금 유사 조세지원성 급여(TBSP-cash: Tax Breaks Similar to Cash Benefits, 이하 현금 유사 TBSPs)만을 가산하여 산출한다(OECD, 2019). 현금 유사 TBSPs만 더하는 이유는 순지표를 ‘현금 기준(net cash)’으로 계산하기 위함인데, 여기에 포함되는 항목은 현금

[표 1] OECD 사회복지지출 지표의 산출식

| 지표                  | 산출식                                          |
|---------------------|----------------------------------------------|
| 총사회지출(a)            | 공공사회지출 + 민간사회지출(의무, 임의)                      |
| 순사회지출(b)            | 총사회지출 - Claw back(공공, 민간) + TBSPs(현금유사)      |
| 순조세효과(a-b)          | Claw back(공공, 민간) - TBSPs(현금유사)              |
| 의무사회지출(d)           | 공공사회지출 + 민간사회지출(의무)                          |
| 의무사회지출 - 순사회지출(d-b) | Claw back(공공, 민간) - TBSPs(현금유사) - 민간사회지출(임의) |

주: 순조세효과(NTE) = Claw-back(직간접세·사회보험료) - TBSPs(현금유사). 연금 관련 TBSPs는 국제 비교 가능성 제약으로 순조세효과 계산에서 제외됨.

출처: “OECD SOCX Manual 2019 edition: A guide to the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OECD, 2019, p. 37, 재정리.

성 세액공제, 취약계층·부양가족 공제 등으로 가처분소득을 직접 늘리는 제도이다. 민간급여 유도형 TBSPs는 장래의 민간사회지출을 증가시켜 이미 민간사회지출 항목에 반영되므로 순조세효과에 다시 가산하면 중복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외된다(OECD, 2023). 이 글에서는 한국과 같이 대규모 세제지원과 민간 지출 의존이 큰 ‘작은 복지국가’의 특성을 간결하게 포착하기 위해 보조적으로 ‘의무지출-순지출’ (=공공+의무민간-NSE) 지표도 함께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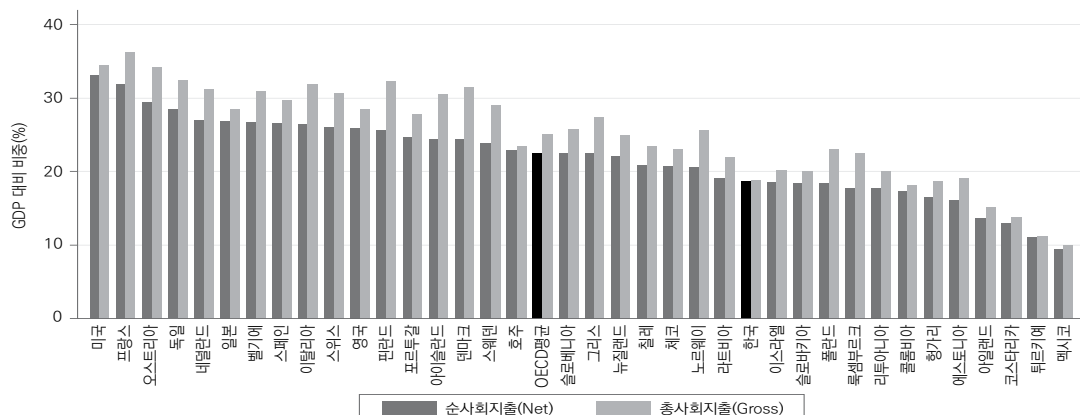
[그림 1]은 2021년의 총지출과 순지출을 비교한 결과이다. 총지출의 OECD 평균은 GDP 대비 약 25.1%, 순지출은 약 22.6% 수준으로 순지출이 총지출보다 낮게 나타난다. 북·서유럽 국가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두드러지는데,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의 경우 직간접세 회수 규모가 커서 순지출이 총지출보다 6~7%포인트 감소한다. 반면 한국, 호주, 멕시코, 튀르키예 등은 총지출과 순지출이 거의 동일한데, 한국의 경우 총지출이 18.8%, 순지출이 18.7%로 격차가 0.1%포인트에 불과하다. 미국, 일본, 이스라엘은 총지출 대비 순지출이 다소 낮은 수준을 보인다.

[그림 2]는 순조세효과(Net Tax Effect)의 2019년 기준 단년도 분해 통계로 환수세액의 세부 구조와 현금유사-TBSP 외에 민간 급여 관련 -TBSPs도 함께 보여 준다(OECD, 2023). 순조세효과에 대한 분해통계는 환수세액과 현금유사 TBSPs가 실질 복지 규모를 어떻게 조정하는지의 메커니즘을 드러낸다. 먼저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는 순조세효과가 GDP 대비 5% 이상으로 높

[그림 1] 순사회복지지출과 총사회복지지출(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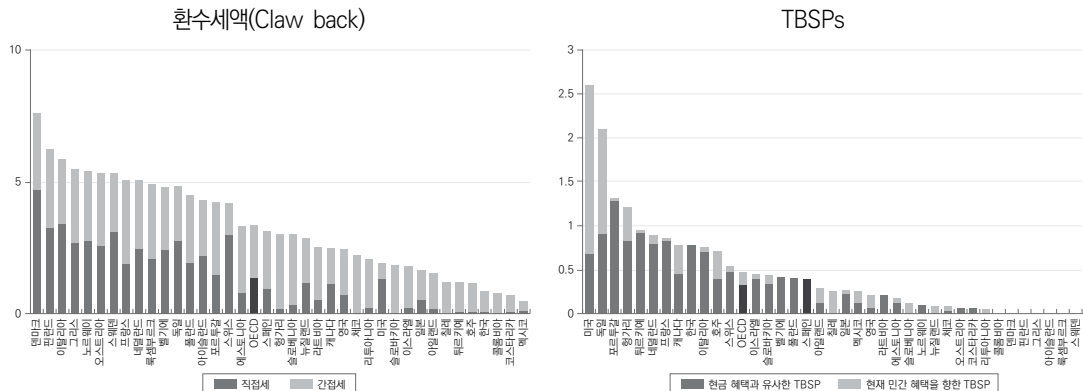
(단위: % of GDP)



출처: “Social Expenditure Aggregates (SOCX)”, OECD, 2025a, OECD Data Explorer, <https://data-explorer.oecd.org/> 원자료 분석.

[그림 2] 환수세액과 TBSPs 규모(2019)

(단위: % of G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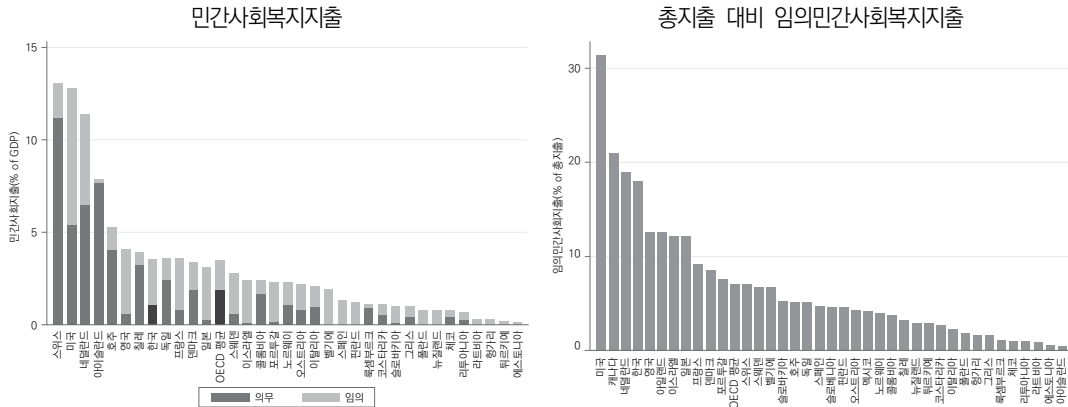
출처: "Social Expenditure (SOCX) Update 2023: Private social expenditure and the influence of tax systems", OECD, 2023, [https://www.oecd-ilibrary.org/content/dam/oecd/en/publications/reports/2015/10/private-social-expenditure-and-the-influence-of-tax-systems\\_46d74b0c/861a838d-en.pdf](https://www.oecd-ilibrary.org/content/dam/oecd/en/publications/reports/2015/10/private-social-expenditure-and-the-influence-of-tax-systems_46d74b0c/861a838d-en.pdf)

게 나타난다. 특히 덴마크는 복지급여에 부과되는 소득세만 GDP의 5%에 육박하고, 간접세 효과까지 더하면 약 7%에 이른다. 이들 국가는 현금유사 TBSPs가 거의 없고 환수 중심으로 설계되어 ‘고지출-고환수’ 모델의 전형을 이룬다. 반면 이탈리아, 그리스 등은 총환수 규모는 비슷하되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비중이 2~3%포인트 더 큰 ‘간접세 의존형’ 회수 구조를 보인다. 이에 비해 한국, 멕시코, 튀르키예는 환수폭이 1%에도 못 미치는 저환수형을 보인다. 한국은 교육비·의료비 등 현금유사 TBSPs가 GDP의 약 1%로 OECD 평균을 다소 상회하여 작은 환수를 상당 부분 상쇄한다. 미국은 환수 규모 자체는 한국보다 크지만, 고용주 의료보험료 공제 등 민간·현재편익 유도형 TBSPs가 발달해 세제·민간 지출 의존적 조정이 두드러진다.

민간사회지출 역시 복지국가의 재정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그림 3]에서 왼쪽 그림은 GDP 대비 민간사회복지지출(private social expenditure, 이하 민간지출)을 임의민간사회복지지출(voluntary private social expenditure, 이하 임의민간지출)과 의무민간지출로 구분해서 제시했다. 오른쪽 그림은 총지출 대비 임의민간지출을 보여 주고 있다. GDP 대비 민간지출을 보면 스위스, 네덜란드, 미국, 캐나다는 GDP 대비 8~12%로 높다. 이들 국가는 국민연금과 별개로 기업 또는 직역별 ‘의무퇴직연금’을 강제하거나, 민간건강보험료를 강제 부과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 뒤를 잇는 영국, 한국, 프랑스, 일본은 임의민간지출 비중이 더 높다. 예컨대 호주는 ‘슈퍼애뉴에이션’(고용주 의무 부담) 비중이, 한국은 퇴직연금, 사

[그림 3] 민간사회복지지출과 총지출 대비 임의민간사회복지지출(2021)

(단위: %)



출처: "Social Expenditure Aggregates (SOCX)", OECD, 2025a, OECD Data Explorer, <https://data-explorer.oecd.org/> 원자료 분석.

보험과 같은 임의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독일, 프랑스처럼 총사회지출이 높은 북·서 유럽 국가는 민간지출이 GDP의 1~2% 수준에 그치는데, 대부분 의무연금 보충 부담으로 민간 부문이 복지 전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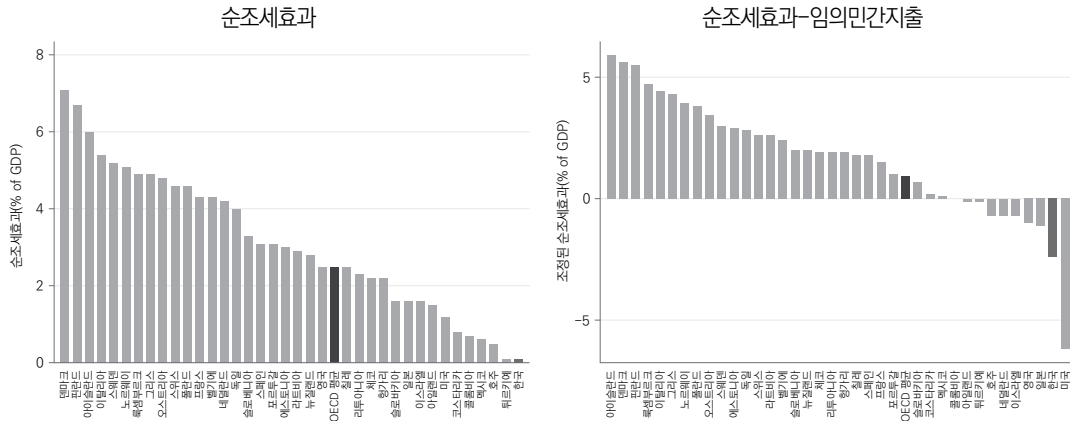
다음으로 총지출 대비 임의민간지출(자발적 사적 보험·기업복지 등) 비중을 보면 네덜란드를 제외하고 영미권 및 동아시아 국가에서 높게 나타난다. 이들 국가에서는 임의민간지출의 비중이 총지출의 10% 이상으로 민간 부문이 복지 자원 조달에서 사실상 주요한 축을 담당함을 시사한다. 그래프 오른 쪽 상단에 위치한 북·서 유럽 대다수 국가는 5% 미만에 머물러 민간의 역할이 제한적이고 조세·사회보험을 통한 공적 시스템이 우세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는 임의민간사

회지출이 GDP 대비 1%에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경향을 보이는 이유는 임의민간사회지출이 '시장에 완전히 맡겨진 영역'이 아니라 일정 부분 정부 정책으로 조정 가능한 변수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임의 민간지출에 대해 소득·세액공제 같은 세제지원(TBSPs)을 확대함으로써 이를 지원할 수도 있고, 공제 한도를 축소하거나 급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민간지출 의존도를 낮출 수도 있다.

[그림 4]는 순조세효과(Net Tax Effect)와 여기서 임의민간지출을 차감한 값을 함께 보여 준다. 먼저 순조세효과 자체를 보면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는 GDP 대비 5%에 달하는 높은 수준을 기록한다. 이탈리아, 스웨덴, 노르웨이도 3~5%포인트 범위에 속한다. 이는 앞서 [그림 2]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대규모 환수세액에 기인한다. 반대로 한국, 멕시코, 튀르키예는 1% 이하로, 사실상 '세금

[그림 4] 순조세효과 및 순조세효과에서 임의민간복지지출 차감한 효과(2021)

(단위: % of GDP)



출처: "Social Expenditure Aggregates (SOCX)", OECD, 2025a, OECD Data Explorer, <https://data-explorer.oecd.org/> 원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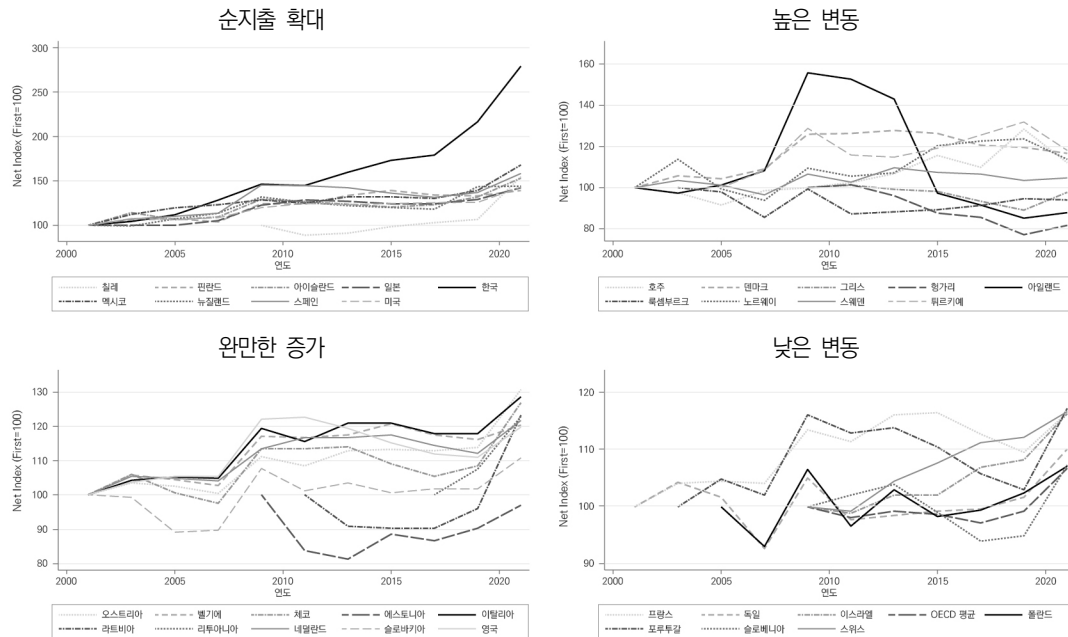
없는 급여' 구조에 가깝다. 다음으로 순조세효과에서 임의민간지출을 차감한 값을 보면 민간지출 규모가 큰 나라일수록 수치가 더 낮아진다. 미국(-6.2%포인트), 한국(-2.4%포인트), 네덜란드(-0.7%포인트)는 음의 값을 보인다. 북유럽 국가는 차감 이후에도 여전히 큰 양(+)의 값을 유지하여 세제 혜택이나 민간지출 의존도가 낮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별 차이를 선명하게 드러낸다. 북·서 유럽은 '고지출·고환수형', 영미권과 한국은 '세제·민간 의존형'에 가까운데, 특히 한국은 복지 규모와 조세 환수가 모두 상대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다.

### 3 주요국의 총·순사회복지지출의 변화

[그림 5]는 최근 20년간 사회지출의 변화 속도를 파악하기 위해 주요국의 순사회지출, 총사회지출, 공공사회지출, 임의민간사회지출을 2001년 기준(100)으로 지수화하여 시계열로 나타낸 것이다. 순사회지출의 변화를 유형화하여 제시하기 위해 K-means 클러스팅<sup>1)</sup>을 활용하여 세 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Hartigan, & Wong, 1979). 세 번째 그룹은 가독성을 고려하여 2개의 그룹으로 제시

1) 국가별 순사회지출 지수(net\_idx)의 궤적을 유형화하기 위해 K-means 클러스터링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① 성장률(최초-최종값 차이를 구간 길이로 나눈 연평균 변화율), ② 변동폭(전 기간 최대-최소값 차이), ③ 낙폭(최대값-최종값)을 추출하였다. 최초-최종 연도와 값은 각국의 실제 관측값을 기준으로 하였고, 극단값이 거리 계산을 왜곡하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 분위수(rank) 기반의 퍼센타일 변환으로 0~1 구간 정규화를 실시하였다. 이는 경험적 누적분포(ECDF)를 활용한 강건(robust) 표준화 방식으로, 상대적 위치를 보존하면서 이상치의 영향을 줄인다. 추가로 분포 내 변동성이 큰 집단을 식별하기 위해 낙폭의 75백분위수를 기준으로 이진 표시변수를 생성하였다. 군집화는 Stata의 k-means를 활용해 성장·변동·낙폭 변수를 입력값으로 사용하고, 제곱유클리드 거리를 기반으로 군집 수를 3개로 설정하였다. 반복(iterate)을 5000회 이상 수행해 초기값에 따른 불안정을 최소화하였다.

[그림 5] OECD 국가의 순사회복지지출 변화(2001~2021)



주: 칠레, 에스토니아, 그리스, 헝가리, 스위스, OECD는 2009년부터, 룩셈부르크, 포르투갈은 2003년부터, 폴란드, 튀르키예는 2005년부터, 라트비아는 2011년부터 100으로 설정하여 지수화함. 나머지 국가는 2001년을 기준으로 지수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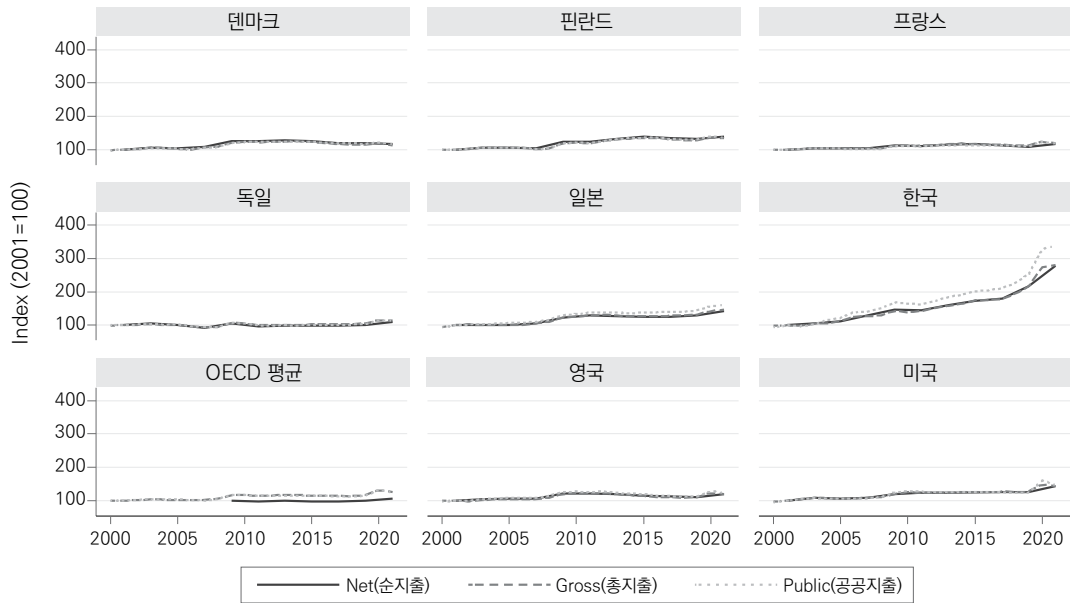
출처: "Social Expenditure Aggregates (SOCX)", OECD, 2025a, OECD Data Explorer, <https://data-explorer.oecd.org/> 원자료 분석.

하였다. 대체로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2020~2021) 등 외생적 충격 시기에 지수가 급등하는 공통적인 패턴을 보였는데, 이는 경제위기 시기 세제감면 등 정책적 대응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집단별로 살펴보면 2001년 기준 복지지출 수준이 비교적 낮았던 한국, 칠레, 멕시코는 순지출 상승률이 가파르게 나타난다. 특히 한국은 2001년 대비 2021년에 지수가 약 2.8배(279)로 치솟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아일랜드, 헝가리 등은 경제위기 직후 순지출 지수가 급등했다가 재정긴축으로 조정이 나타나는 수축형

궤적을 보였다. 프랑스, 독일, 덴마크 같은 서유럽 및 북유럽 국가들은 사회지출 수준이 높아서 20년간 지수 변동폭이 100에서 120 내외(약 20% 상승)에 그쳤다.

다음으로, [그림 6]은 주요국을 중심으로 2001년을 100으로 설정하였을 때 총지출, 공공지출, 순지출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이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은 이미 높은 복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20년간 지수 변동폭이 비교적 적다. 이 중 핀란드는 성숙한 복지국가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사회지출은 약 37.2% 증가하였고, 순사회지출도

[그림 6] 주요국의 총사회지출 및 순사회복지지출 변화(2001~2021)



주: 2001년을 100으로 설정한 수치임.

출처: "Social Expenditure Aggregates (SOCX)", OECD, 2025a, OECD Data Explorer, <https://data-explorer.oecd.org/> 원자료 분석.

[표 2] 2021년 기준 사회복지지출지표의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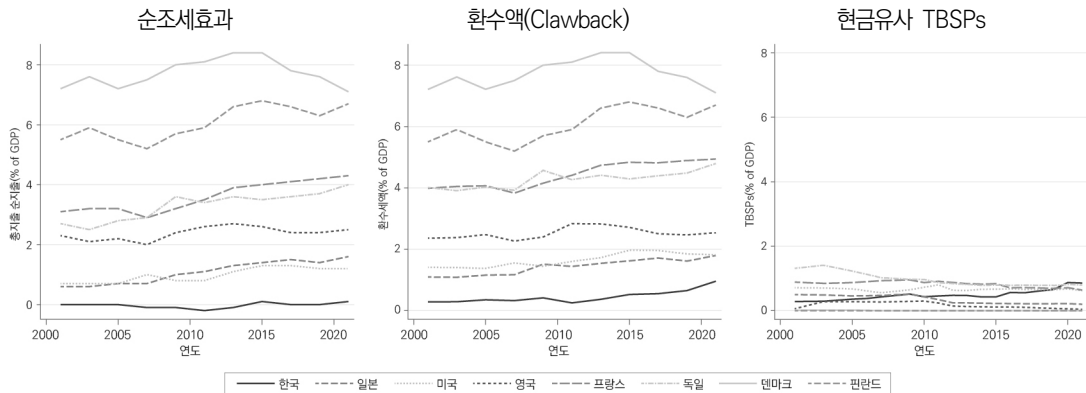
| 국가      | 공공사회지출 | 총사회지출 | 순사회지출 | 임의민간사회지출 |
|---------|--------|-------|-------|----------|
| 덴마크     | 115.6  | 112.1 | 116.7 | 39.5     |
| 핀란드     | 137.2  | 135.1 | 139.1 | 100      |
| 프랑스     | 117.2  | 118.6 | 116.4 | 103.7    |
| 독일      | 113.3  | 113.6 | 110.0 | 66.7     |
| 영국      | 123.2  | 118.8 | 119.8 | 92.1     |
| 미국      | 146.9  | 143.9 | 143.1 | 82.2     |
| 일본      | 160.8  | 146.2 | 142.3 | 84.8     |
| 한국      | 337.8  | 280.6 | 279.1 | 147      |
| OECD 평균 | 125.6  | 126.1 | —     | 106.7    |

주: 2001년을 100으로 설정한 수치임.

출처: "Social Expenditure Aggregates (SOCX)", OECD, 2025a, OECD Data Explorer, <https://data-explorer.oecd.org/> 원자료 분석.

[그림 7] 주요국의 순조세효과 변화(2001~2021)

(단위: % of GDP)



주: 2001년을 100으로 설정한 수치임.

출처: "Social Expenditure Aggregates (SOCX)", OECD, 2025a, OECD Data Explorer, <https://data-explorer.oecd.org/>와 "OECD Social Expenditure Update: Tax Data by Country 2025", OECD, 2025b, <https://webfs.oecd.org/Els-com//Social-Expenditure-Database/OECD-Social-Expenditure-Update-Tax-Data-by-Country-2025.xlsx>, 원자료 분석

39.1%가량 증가하였다. 나머지 국가들은 대체로 20% 이하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미국과 일본, 한국은 증가율이 높은 편에 속하는데, 일본은 고령화로 인해 공공사회지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한국에 비해서는 변화의 속도가 다소 제한적이다. 한국은 공공사회지출 지수가 2021년에 337 수준이며 순지출 지수는 279이다.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현금급여 신설과 보건, 연금 지출이 확대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공공지출 지수는 2001년 대비 2021년 약 180으로 비교적 완만하지만, 공제제도가 순지출을 덜어 주어 순지출이 총지출을 소폭 상회한다.

다음으로, 주요국 순조세효과와 변화를 살펴본다. 순조세효과와 시계열 자료는 SOCX DB에서 총지출에서 순지출을 차감하여 산출하였고, 현금유사 TBSPs는 OECD가 제공하는 복지지출에 대한 연도별 조세제도 자료에서 현금유사 TBSPs(Tax breaks similar to cash benefits)를 활용하였다(OECD, 2025b).<sup>2)</sup> 환수세액은 순조세효과에서 현금유사 TBSPs를 더하여 산출하였다.

순조세효과와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면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은 전반적으로 순조세효과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덴마크는 2000년대 중반 정점(6%) 이후 점차 하락해 2021년 4% 초반까지

2) 순조세효과를 산출할 때 사용하는 TBSP는 'Tax breaks similar to cash benefits'의 총액(T1)에서 소비에 부과되는 간접세를 차감한 '순 TBSP'를 활용한다(OECD, 2019). 직접세는 환수세액(clawback) 산정에 반영되므로 TBSPs에서는 간접세만 차감한다.

낮아졌으며, 핀란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최근 소폭 상승했다. 두 국가는 현금유사 TBSPs가 사실상 없어서 순조세효과는 환수액의 변화와 거의 일치한다. 특히 2000년대 초반 2% 전후에서 출발하여 2021년에는 3.5% 내외까지 상승하였다. 이는 사회보험료 인상과 복지급여 과세 강화 등 조세 기반의 복지조정 메커니즘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미국, 영국, 일본은 상대적으로 낮은 순조세효과 수준을 유지했다. 미국은 전반적으로 완만히 상승했으나 2009~2019년에만 환수액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영국은 전체적으로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으나, 2009~2019년 이후에는 환수액이 보다 주도적인 경향을 보였다. 일본도 고령화 압력에도 불구하고 순조세효과는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한국은 순조세효과가 0% 부근으로 매우 낮았다. 특히 2007~2013년에는 순지출이 총지출을

상회하여 음의 값을 기록했다. 이는 2008년 전후 세액·환급공제 등 현금유사 TBSPs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환수(급여 과세·사회보험료)를 초과했기 때문이다. 2011년 이후 환수가 점진적으로 늘었음에도 순조세효과는 여전히 0% 부근에 머물렀다.

〈표 3〉은 국가별 순조세효과(NTE)의 변화 요인을 분해한 결과를 제시한다. 분석은 순조세효과 산식을 활용하여 구간별 총변화를 원인별 기여도로 나누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Adema & Ladaique 2005; Adema et al., 2023). 분석 구간은 ① 2001~2007년(위기 이전), ② 2009~2019년(위기 이후), ③ 2019~2021년(코로나 시기)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구간에서 처음과 마지막 관측치의 차이( $\Delta$ NTE)를 산출하였다. 이어  $\Delta$ NTE를 환수 기여분( $\Delta$ 환수)과 TBSP 기여분( $\Delta$ TBSP)으로 분해하였다. 분류 기준은 절대값에 기반하였다.  $\Delta$ 환수 비중이 0.6 이상이면 ‘환수 주도’, 0.4 이하

[표 3] 국가별 구간별 순조세효과(NTE) 변동의 주도 요인(2001~2021)

| 구분      | 2001~2007                                                              | 2009~2019                                                                           | 2019~2021                                                                                     |
|---------|------------------------------------------------------------------------|-------------------------------------------------------------------------------------|-----------------------------------------------------------------------------------------------|
| 환수 주도   |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스웨덴 | 벨기에,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 |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핀란드, 독일,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
| TBSP 주도 | 독일,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                                             |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 -                                                                                             |
| 혼합      | 호주, 뉴질랜드, 미국                                                           | 호주, 독일, 일본                                                                          | 프랑스, 한국, 뉴질랜드, 미국                                                                             |

주: 2001년 또는 자료가 시작되는 최초 시기를 100으로 설정하고, 시기별로  $\frac{|\Delta \text{Clawbackvert}|}{|\Delta \text{Clawbackvert}| + |\Delta \text{TBSPsvert}|} \geq 0.6$ 을 적용하여 주도 요인을 판별함.

출처: "Social Expenditure Aggregates (SOCX)", OECD, 2025a, OECD Data Explorer, <https://data-explorer.oecd.org/>과 "OECD Social Expenditure Update: Tax Data by Country 2025", OECD, 2025b, <https://webfs.oecd.org/Els-com//Social-Expenditure-Database/OECD-Social-Expenditure-Update-Tax-Data-by-Country-2025.xlsx> 원자료 분석.

이면 'TBSP 주도', 그 사이(0.4~0.6)이면 '혼합'으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환수 주도'는 반드시 순조세효과 상승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환수 감소로 NTE가 하락했다라도 원인의 대부분이 환수 변화에서 비롯되면 '환수 주도'로 분류된다. 반대로 TBSP 확대가 순조세효과 하락을 이끈 경우는 'TBSP 주도'로 표시된다.

국가별·시기별 결과를 보면 대부분 국가에서 환수액의 변화가 순조세효과를 설명하는 주요 요인이었다. 그러나 오스트리아, 독일,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은 일부 시기에서 TBSP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하였다. 시기별로는 환수 주도 국가가 13개국→16개국→18개국으로 늘어났고, TBSP 주도 국가는 6개국→2개국→0개국으로 줄었다. 혼합형은 3개국→3개국→4개국으로 큰 변동이 없었다. 즉 시간이 갈수록 대부분의 국가가 '환수 주도'로 수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순조세효과 결정에 세제지원(TBSP)보다는 급여 과세·사회보험료 부과와 같은 환수 메커니즘이 점점 더 핵심적인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한다.

#### 4 총·순사회지출 차이와 소득분배 지표의 관계

총·순지출 격차는 공공지출의 규모와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다. 복지지출이 커질수록 이를 조정하는 조세·사회보험 환수도 함께 확대되기 때문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순조세효과와 공공사회지출 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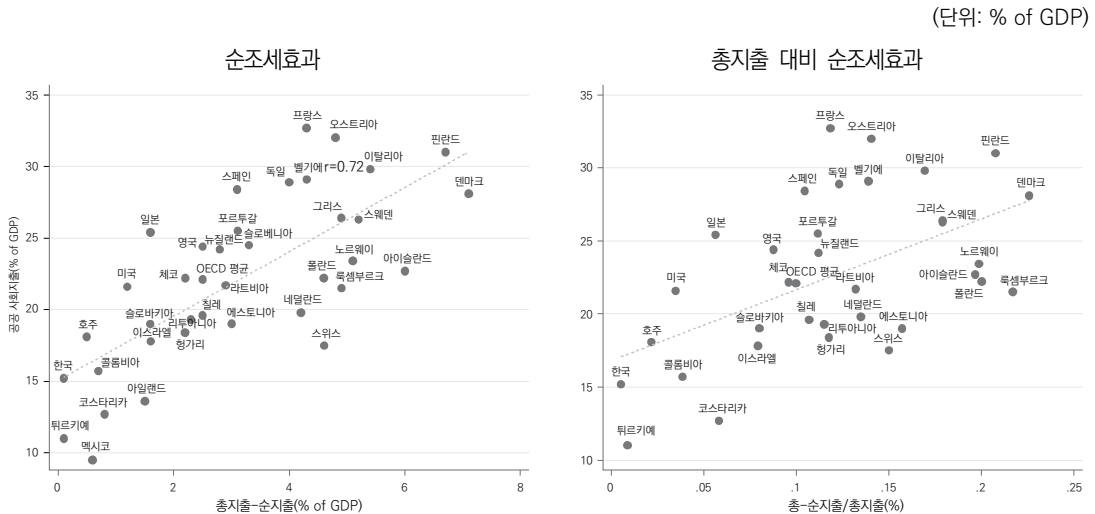
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양의 상관관계( $r=0.72$ ,  $p<0.01$ )가 나타났다. [그림 8]에서 보듯 x축(총·순지출, GDP 대비 %)이 커질수록 y축(공공사회지출, GDP 대비 %)도 상승한다. 즉, 공공복지지출이 클수록 복지급여에 부과되는 세금도 커진다. 프랑스, 덴마크 등 북유럽·대륙의 고지출·고환수형 국가군은 우측 상단에, 한국·호주·멕시코·칠레 같은 저지출·저환수형 국가군은 좌측 하단에 위치한다. 또한 회귀선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스페인, 이탈리아는 동일 지출 대비 회수폭(순조세효과)이 상대적으로 크고, 아일랜드, 멕시코는 동일 지출 수준에서도 회수폭이 작은 편이다. 한국 역시 총지출 대비 회수폭이 작은 국가에 속해 낮은 지출 규모와 더불어 조세 기반 환수 장치가 미약함을 보여 준다.

복지지출 규모뿐 아니라 조세·세제 설계 방식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순조세효과(NTE)와 지니계수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자료는 2000~2021년 OECD 36개국 패널로, 국가 고정효과와 연도 고정효과를 포함하여 국가별 고유 수준과 전체적 충격을 통제한 뒤 연도별 변화를 비교하였다. 종속변수는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이며, 주요 독립변수는 NTE, 환수(clawback), TBSPs이다(OECD, 2025a, 2025b). 통제변수로 1인당 GDP(로그), 실업률,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65세 이상 인구 비중을 포함하였다(World Bank, 2024; Caminada et al. 2012; Wang et al., 2014; Azzollini et al., 2025).<sup>3)</sup> 모형 1과 모형 2는 NTE 총효과만 포함한 기본 모형이며, 모형

3과 모형 4는 NTE를 clawback과 TBSPs로 분해한 결과이다. 표준오차 추정치는 국가별로 표본을 클러스터링한 robust 표준오차를 사용하였고, 추가로 모형 5와 모형 6은 Driscoll-Kraay 표준오차 기법을 적용하여 횡단면 의존성과 시간적 자기상관을 보정하였다. 모든 모형에서 회귀계수는 해당 독립변수가 1단위 증가할 때 지니계수가 얼마나 변동하는지를 나타낸다. 지니계수는 값이 낮을수록 불평등이 완화된다는 의미하므로 회귀계수가 음수이면 조세를 통한 재분배가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방향임을 뜻한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조세 기반 재분배 지표(NTE)와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였다. 총지출 규모 대비 정규화한 모형(NTE/GDP)에서는 NTE/GDP가 1%포인트 상승할수록 지니가 약 0.70포인트 하락( $p < 0.01$ )하는 강한 음(-)의 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는 조세를 통한 재분배 노력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소득불평등이 현저히 낮아짐을 보여 준다. 특히 사회급여에 대한 과세 환수분(clawback)이 커질수록 지니계수가 유의하게 낮아졌다. 반면 TBSPs(사회적 목적의 세제혜택)의 회귀계수는 유의하지 않

[그림 8] 순조세효과와 공공사회지출의 관계



출처: "Social Expenditure Aggregates (SOCX)", OECD, 2025a, OECD Data Explorer, <https://data-explorer.oecd.org/> 원자료 분석.

- 3) 통제변수는 선행 연구에 기반하여 설정하였다(Caminada et al. 2012; Wang et al., 2014; Azzollini et al., 2025). 1인당 GDP의 로그값은 국가의 전반적 발전 단계를 나타낸다. 실업률은 노동시장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관련 문헌에서 가계 소득 분포에 영향을 주는 인구학적 변수로 다루어진다. 고령인구 비율(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인구 고령화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기 위해 포함하였다.

았다. 이는 세액공제, 소득공제가 주로 중산층 이상에 혜택이 집중되거나 규모가 제한적이어서 불평등 완화에 기여하지 못함을 시사한다.

정리하면 국가 경제에서 순조세 효과(NTE)가 차지하는 비중과 소득불평등은 음의 관계를 가진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특히 복지급여에 대한 환수 메커

[표 4] 순조세효과와 지니계수의 관계(2021)

| 변수                      | (1) NTE/<br>GDP FE  | (2) NTE/<br>Gross FE           | (3) Decomp/<br>GDP FE | (4) Decomp/<br>Gross FE | (5) Decomp/<br>GDP DK          | (6) Decomp/<br>Gross DK |
|-------------------------|---------------------|--------------------------------|-----------------------|-------------------------|--------------------------------|-------------------------|
| NTE/GDP                 | -0.697<br>(0.250)** |                                |                       |                         |                                |                         |
| NTE/Gross               |                     | -0.143<br>(0.080) <sup>†</sup> |                       |                         |                                |                         |
| Clawback/ GDP           |                     |                                | -0.917<br>(0.272)***  |                         | -0.917<br>(0.169)***           |                         |
| TBSP/GDP                |                     |                                | -0.725<br>(0.858)     |                         | -0.725<br>(0.542)              |                         |
| Clawback/ Gross         |                     |                                |                       | -0.215<br>(0.095)**     |                                | -0.214<br>(0.071)***    |
| TBSP/Gross              |                     |                                |                       | -0.156<br>(0.232)       |                                | -0.793<br>(0.574)       |
| MPVP/GDP                | 0.009<br>(0.204)    |                                | 0.012<br>(0.221)      |                         | 0.012<br>(0.115)               |                         |
| MPVP/Gross              |                     | 11.144<br>(9.393)              |                       | 10.357<br>(9.375)       |                                | 10.676<br>(4.968)**     |
| ln(GDP pc)              | -4.696<br>(1.738)** | -3.667<br>(1.560)**            | -5.544<br>(1.854)***  | -3.944<br>(1.556)**     | -5.544<br>(1.047)***           | -4.102<br>(0.956)***    |
| 실업률                     | 0.164<br>(0.058)*** | 0.167<br>(0.057)***            | 0.163<br>(0.052)***   | 0.161<br>(0.055)***     | 0.163<br>(0.027)***            | 0.161<br>(0.027)***     |
| 경제활동참가율                 | -0.279<br>(0.197)   | -0.276<br>(0.191)              | -0.249<br>(0.187)     | -0.228 (0.186)          | -0.249<br>(0.127) <sup>†</sup> | -0.227<br>(0.110)**     |
| 65세 이상 비중               | -0.206<br>(0.256)   | -0.276<br>(0.259)              | -0.196<br>(0.241)     | -0.276<br>(0.252)       | -0.196<br>(0.098) <sup>†</sup> | -0.280<br>(0.075)***    |
| 연도 FE                   | Yes                 | Yes                            | Yes                   | Yes                     | Yes                            | Yes                     |
| 국가 FE                   | Yes                 | Yes                            | Yes                   | Yes                     | Yes                            | Yes                     |
| Obs / Countries         | 266 / 36            | 266 / 36                       | 266 / 36              | 266 / 36                | 266 / 36                       | 266 / 36                |
| R <sup>2</sup> (within) | 0.315               | 0.296                          | 0.315                 | 0.315                   | 0.341                          | 0.326                   |

주: \*\*\* $p < 0.01$ , \*\* $p < 0.05$ , \* $p < 0.10$ ,  $p \leq 0.10$ . (1)-(4): 국가 고정효과 + 연도 더미, 클러스터-강건 표준오차. (5)-(6): 국가 고정효과 + 연도 더미, Driscoll-Kraay 표준오차(최대 레그=2).

출처: "Social Expenditure Aggregates (SOCX)", OECD, 2025a, OECD Data Explorer, <https://data-explorer.oecd.org/>; "OECD Social Expenditure Update: Tax Data by Country 2025b", OECD, 2025, <https://webfs.oecd.org/Els-com//Social-Expenditure-Database/OECD-Social-Expenditure-Update-Tax-Data-by-Country-2025.xlsx>;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World Bank, 2024, <https://databank.worldbank.org/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를 토대로 자료를 구축하여 분석.

니즘이 불평등 완화 효과를 견인하는 반면 TBSPs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불평등 완화 효과가 제한적임을 보여 준다. 이는 '세제 지원 확대보다 복지급여에 대한 조세·사회보험료 설계가 불평등 완화에 더 직접적인 역할을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 5 나가며

한국은 공공사회복지지출의 증가와 더불어 민간사회복지지출 비중도 꾸준히 확대되었다. 2021년 한국의 임의민간지출은 GDP 대비 약 5% 수준으로, 총지출 중 두 자릿수 비중을 차지하며 미국, 영국 등 영미권과 유사한 시장주도형 복지 구조를 보인다. 이는 복지 재원의 한 축을 시장에 의존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세제지원을 통한 간접적 지원이 크게 작용했음을 시사한다.

OECD 사회지출 통계에서는 북·서 유럽 국가가 '고지출-고환수형', 영미권 및 한국이 '세제-민간의존형'으로 구분된다. 한국은 순조세 효과가 1% 미만으로 사실상 '세금 없는 급여'에 가까운 국가군에 속하는데, 현금유사 TBSPs가 상대적으로 커서 작은 환수세액을 상쇄한다. 총지출 대비 임의민간지출의 비중도 10% 이상으로, 북유럽(5% 미만)과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

순지출 지표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2001~2021년 지수를 기준으로 K-means 군집화한 결과 (a) 저기저점에서 빠르게 확대(한국·칠레·멕시코), (b) 위기 후 급등·조정(아일랜드·헝가리 등), (c) 고수준의 완만한 증가(북·서 유럽)의 세 유형이 관찰되었다. 한국은 2001년 대비 2021년 순지출 지수가 약 2.8배로 상승해 최상위 증가 그룹에 속했고, 2007~2013년에는 순지출이 총지출을 상회하는 '총-순 역전'이 발생했다. 이는 현금유사 TBSPs의 급확대가 환수(claw-back)를 초과한 결과로 해석된다. 시기별 NTE 분해 결과 대부분 국가는 시간이 갈수록 '환수 주도'로 수렴하였다(2001~2007: 13개국 → 2019~2021: 18개국). 독일·프랑스는 환수 강화와 TBSP 축소로 NTE가 점증한 반면 한국·미국·영국은 낮은 NTE 수준이 지속되었다. 한국은 시기별로 TBSPs와 환수의 상대적 기여가 달라지는 혼합형 양상을 보였다.

순지출 지표와 소득분배 간의 관계를 살펴본 고정효과 패널 분석에서 NTE/GDP가 1%포인트 상승할수록 가처분 지니계수는 유의하게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구성 요소 분해에서는 환수세액(claw-back) 확대가 지니계수를 유의하게 낮추는 반면 현금유사 TBSPs는 평균적으로 유의성이 낮게 나타났다. 한편 총지출-순지출 격차가 클수록 공공지출 비중도 큰(상관  $r \approx 0.72$ ) '고지출-고환수'의 정합적 조합이 관찰되었다. 한국에서 나타난 TBSPs 중심의 우회적 지원은 분배효율성 측면에서 한계를 노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민간의존·세제지원 확대 경로만으로는 불평등 완화를 충분히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 준다. 특히 보편급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서구 유럽과 같이 복지

순사회복지지출과 순조세효과로 본 복지국가의 실질 규모와 재분배: OECD 사회복지지출(SOCX)을 중심으로

급여에 대한 명시적인 과세 원칙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 연구에서 수행된 패널분석은 선행 연구에서 논의되는 주요 변수는 포괄하고 있지만, 기존 연구에서 논의된 다양한 변수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연도 고정효과만으로는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누락 변수 편의가 남는다. 이러한 이유로 이 연구의 추정치는 정책의 인과효과라기보다 상관관계에 대한 탐색적(exploratory) 증거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정책적 일반화에는 신중한 필요가 있다. 향후 추가적인 가변 요인의 체계적 통제, 지연된 종속변수를 포함한 동태패널 및 공통 요인 보정 등 견고성 검증의 확장 및 불평등 지표의 교차검증(시장·가처분 지니, 상위소득분위 등)을 통해 인과적 해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㉔

## 참고문헌

- Adema, W. (1999). *Net Social Expenditure* (OECD Labour Market and Social Policy Occasional Papers No. 39). OECD Publishing.
- Adema, W. (2001). *Net social expenditure – 2nd Edition*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115). OECD Publishing.
- Adema, W., & Ladaique, M. (2005). *Net Social Expenditure, 2005 edition*. OECD.
- Adema, W., Fron, P., & Ladaique, M. (2023). *Net Social Expenditure 2023: Methodology and Results*.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 Antonelli, M. A., & De Bonis, V. (2017). Social spending, welfare and redistribution: a comparative analysis of 22 European countries. *Modern Economy*, 8(11), 1291.
- Azzollini, L., Breen, R., & Nolan, B. (2025). Changing household structures, household employment, and poverty trends in rich countrie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35(4), 362–376.
- Caminada, K., Goudswaard, K., & Koster, F. (2012). Social income transfers and poverty: A cross-country analysis for OECD countrie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21(2), 115–126.
- Driscoll, J. C., & Kraay, A. C. (1998). Consistent covariance matrix estimation with spatially dependent panel data.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0(4), 549–560.
- Hartigan, J. A., & Wong, M. A. (1979). Algorithm AS 136: A k-means clustering algorithm. *Applied Statistics*, 28(1), 100–108.
- Fishback, P. V. (2010). *Social welfare expenditure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Nordic countries: 1900–2003* (No. w15982).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OECD. (2019). *OECD SOCX Manual 2019 edition: A guide to the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https://www.oecd.org/socx/>

- oecd.org/social/soc/SOCX\_Manuel\_2019.pdf
- OECD. (2023). *Social Expenditure (SOCX) Update 2023: Private social expenditure and the influence of tax systems*. OECD. <http://www.oecd.org/social/expenditure.htm>.
- OECD. (2025a). “Social Expenditure Aggregates (SOCX) Data Explorer”, <https://data-explorer.oecd.org/> (2025.9.2. 접속)
- OECD. (2025b. April 4). *OECD Social Expenditure Update: Tax Data by Country 2025* [Data set]. <https://webfs.oecd.org/Els-com/Social-Expenditure-Database/OECD-Social-Expenditure-Update-Tax-Data-by-Country-2025.xlsx>
- Wang, C., Caminada, K., & Goudswaard, K. (2014). Income redistribution in 20 countries over time.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23(3), 262–275.
- World Bank. (2024).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The World Bank. <https://databank.worldbank.org/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

# Assessing the Size and Redistributive Effects of Welfare States: Evidence from Net Social Expenditure and Net Tax Effect in OECD Social Spending

Choi, Hyejin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Premised on the recognition that it is difficult by indicators of public social and total social expenditures alone to arrive at a precise measure of the size of a welfare state, this study in its analysis of 2001–2021 OECD SOCX data incorporates net social expenditure, the net tax effect, and private social expenditures. The net tax effect is defined as the difference between the amount clawed back through the taxation of welfare benefits and the value of tax breaks for social purposes (TBSPs) comparable to cash benefits. The analysis yielded several findings. First, Denmark, Finland, France, and Germany exhibited a large net tax effect (6–7 percent), indicating a “high expenditure, high claw-back” type, while Australia and the United States displayed a pattern of “high reliance on taxation and private spending.” During the period, Korea’s gross social expenditure as a share of GDP was either roughly equal to its net social expenditure in some years—for example, 18.8 percent and 18.7 percent in 2021—or even lower in others, when the net tax effect turned negative. Second, in many countries since the 2010s, variations in the net tax effect—the difference between gross and net social expenditures—have increasingly been driven by the claw-back factor. Germany and France saw their net tax effect increase over time due to stronger claw-back measures and reduced TBSPs, while in Korea, the US, and the UK, the net tax effect remained low, with an embedded mixture of claw-back measures and TBSPs. Third, the analysis found that the larger the net tax effect as a percentage of GDP, the more significant was the decrease in in the Gini coefficient. Our decomposition of the net tax effect attributes much of the distributive improvement to claw-back taxation and little of it to TBSPs. At times such as now when welfare benefits are becoming increasingly universal, Korea stands in need of revamping taxation and claw-back regulations on welfare benefits and restructuring the management of its continuously growing TBSPs.